

“6일부터” vs “1일부터”...여야 3월 임시국회 개시일 대치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 결론 못내 박홍근 “尹 정권 입법권 무력화” 주호영 “휴일 개시 방안 위한 것”

여야가 22일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개회일을 둘러싼 견해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 동안 2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안전 및 3월 임시국회 일정, 정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3월 첫날부터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첫 주를 건너뛰고 3월 6일에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와 관련해 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 6일부터 소집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폐단을 막고자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 (3월 임시) 국회를 안 열어 도 된다"며 "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빔튼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 (3월 임시) 국회를 안 열어 도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어 도 법안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부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날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계속 선거에 지고도 뭐 때문에 쫓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소아과 기피는 정부 잘못”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서 간담회 “건보 부족하면 재정 투입 바꿔야” 24시간 상담센터 조속 이행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소아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공의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방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흰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 정책간담회를 열어 소아 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아병동에서 소아암치료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부모님 애를 많이 썼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씩씩하게 잘 견디는 게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계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 그런지 오히려 저희가 자랄 때 보다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교육·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는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이런 노력의)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아전공의 부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野 “물가상승 주범은 정부”...與 “文정권 5년치 청구서”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난방비 소중값 등 물가 관리 공방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리인상 압력에 따른 물가 관리 문제를 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야당은 특히 부쩍 불어난 난방비에다 소중값 인상 등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난방비 급등에 공공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하다.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압박·위축되는 사례들”이라며 “소중값 6000원 시대가 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에 물가안정 대책을 7번 발표했다. 실효성이 없으니 계속 발표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정태호 의원은 추 부총리가 최근 한 포럼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며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은 100% 맞는 말씀인데, 물가상승의 주범은 정부”라고 했다. ‘정책 언박싱’도 강하게 질타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세비 제세지원 확대, 은행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 방침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간)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연말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까지 10%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8%로 결정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세제지원’ 추가

확대 지시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를 15%로 확대 추진하는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전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 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일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국가부채가 급등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순석 의원은 “2020~2021년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산업용 가스 도매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조정했는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는 평행선으로 가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소폭 올랐다”며 “(전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를 포퓰리즘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대출 의원은 “올해 값어치야할 국고채비 이 사상 최대 규모다. 문 정권이 5년 동안 쌓은 청구서가 무더기로 날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